

복지3.0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11. 24.

임영모

책임연구원

복지 서비스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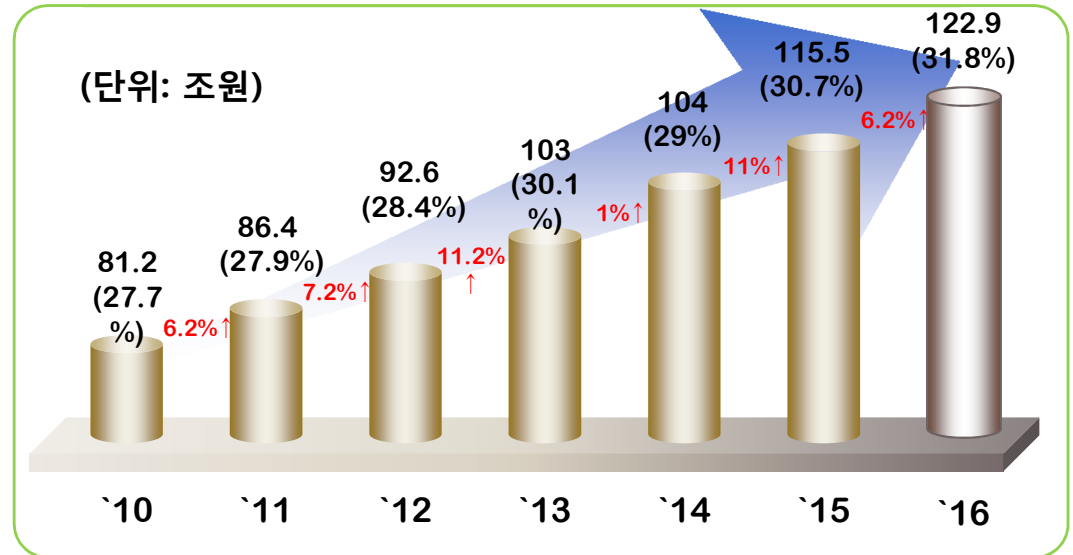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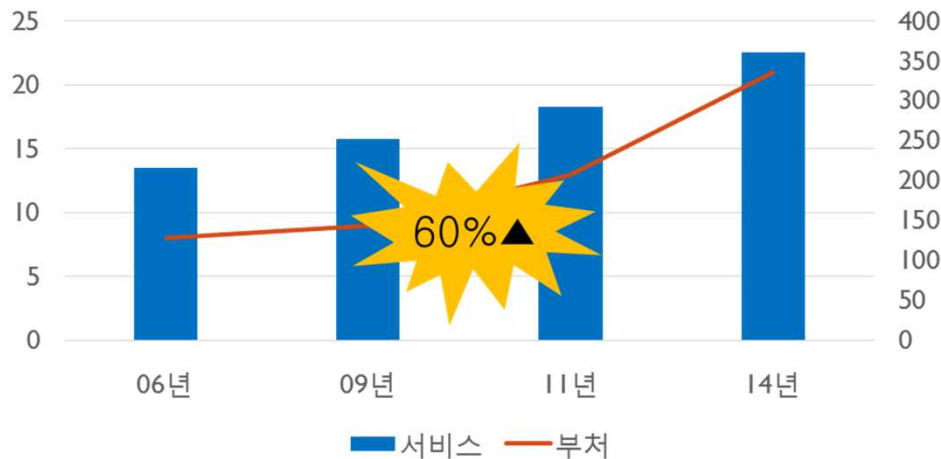
● 사회보장 영역과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앙부처 복지사업: 6개 부처 216개('06년) → 21개 부처 360개('14년)
- 복지 대상자: 700백만명('10년) → 2,700백만명('15년)

● 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재정부담 가중

- 복지 예산: 81.2조원('10년) → 122.9조원('16년)
- 복지 예산 비중: 27.7%('10년) → 31.8%('16년)

중앙부처 복지서비스('14년12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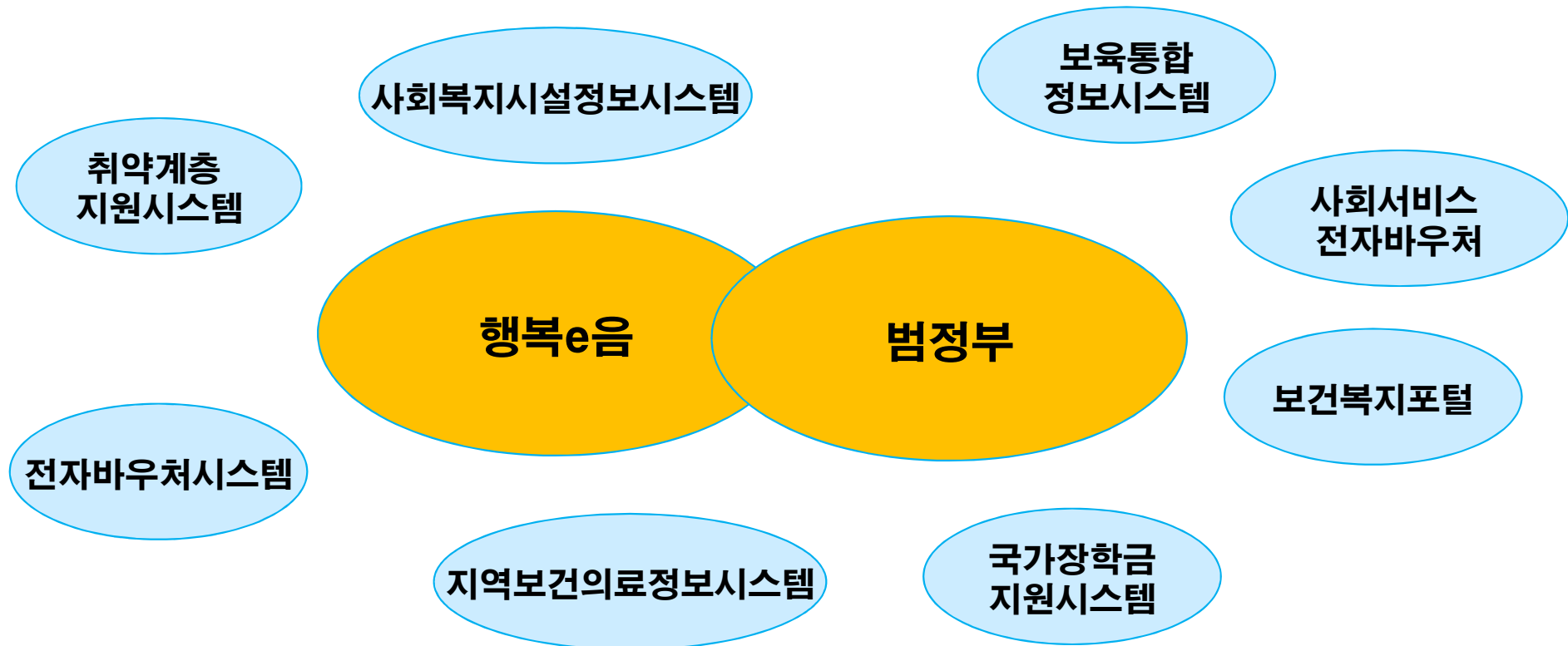


※ 주: 2016년은 정부 案

자료: 기획재정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복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복지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담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
 - 행복e음(’10년 개통) : 228개 시군구 38,000명의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이용
 - 범정부(’13년 개통) : 360개 중앙부처 복지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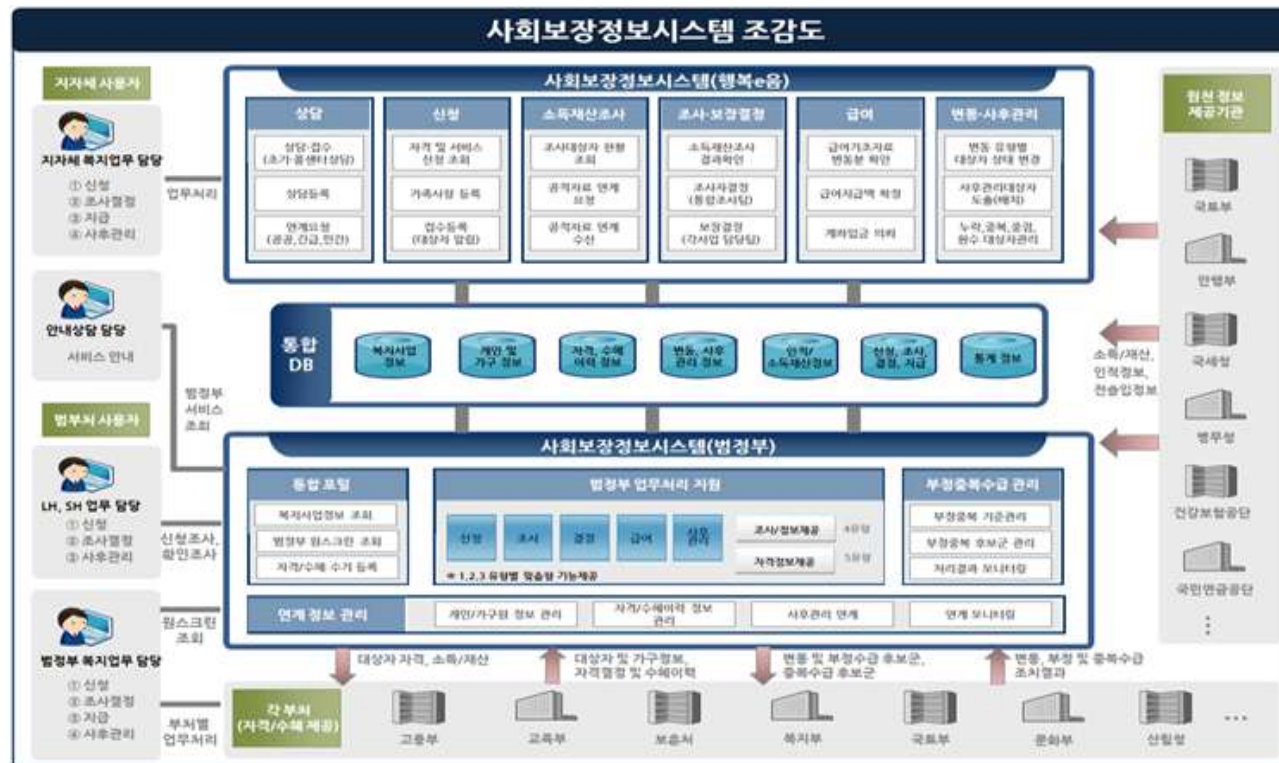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징

● 방대한 복지 관련 정보의 연계와 공유

- 45개 기관 598종의 소득·재산 및 서비스 이력정보 연계(행복e음)

●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읍면동: 상담, 사각지대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집중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자격관리),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

1 투입비용 대비 재정절감 효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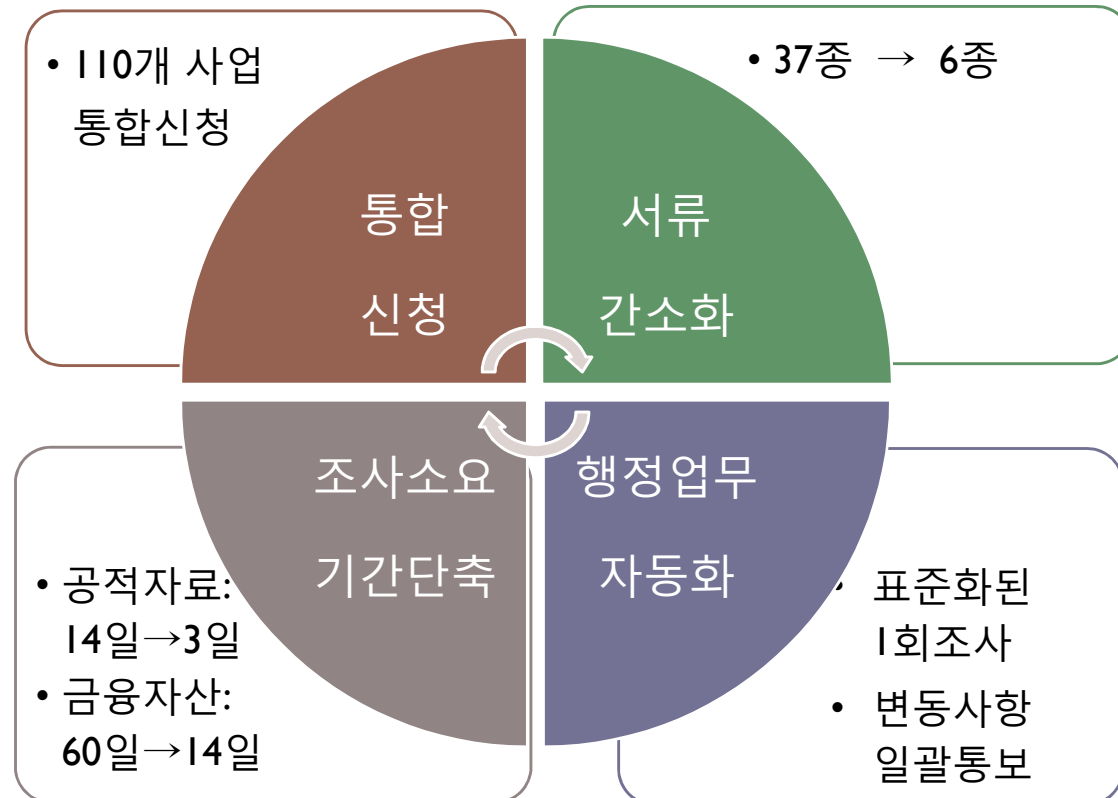
- 지금까지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억원 정도 투입
-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해 2조 5,288억원의 재정을 절감('10~ '15년 상반기)

(단위; 백만원)

년도	초기 구축비	추가 구축비	운영 유지 보수비
2010	28,626	17,855	4,900
2011		18,276	7,865
2012		14,179	9,484
2013		21,580	8,432
2014		26,774	8,617
2015		22,600	8,442
소계	28,626	121,264	47,740

2 행정처리 속도 향상

- 신청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고 110여개 사업을 일괄신청
- 소득·재산 조사 업무를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자동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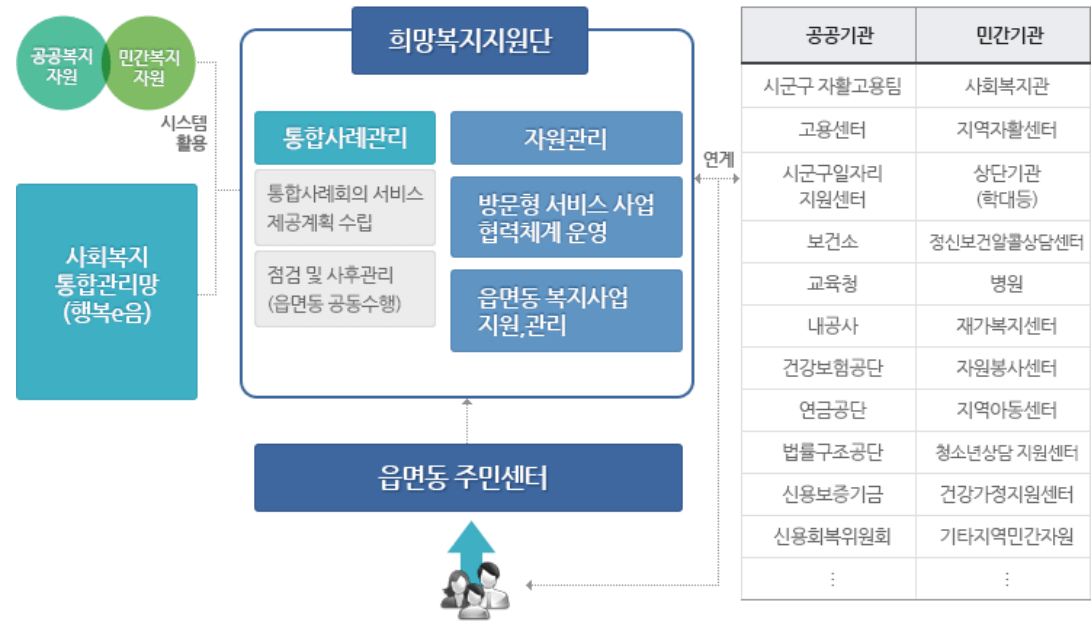
3 부처간 협업 및 칸막이 해소 기반 마련

- 부처별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확립 및 공적자료 공동활용
- 유사 사업의 유형별(76개 사업 154종)관리로 중복수급 방지 및 행정력 절감

사업명	이전	개선	주요성과
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소득증빙 자료 신청인 제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10→14종) · 제출서류 (5→1종) · 조사기간 (2주→8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식 · 건강보험료 · 신청장소 -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식 · 소득인정액 · 신청장소 -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인효과 차단 · 신청편의성 향상 · 선정정확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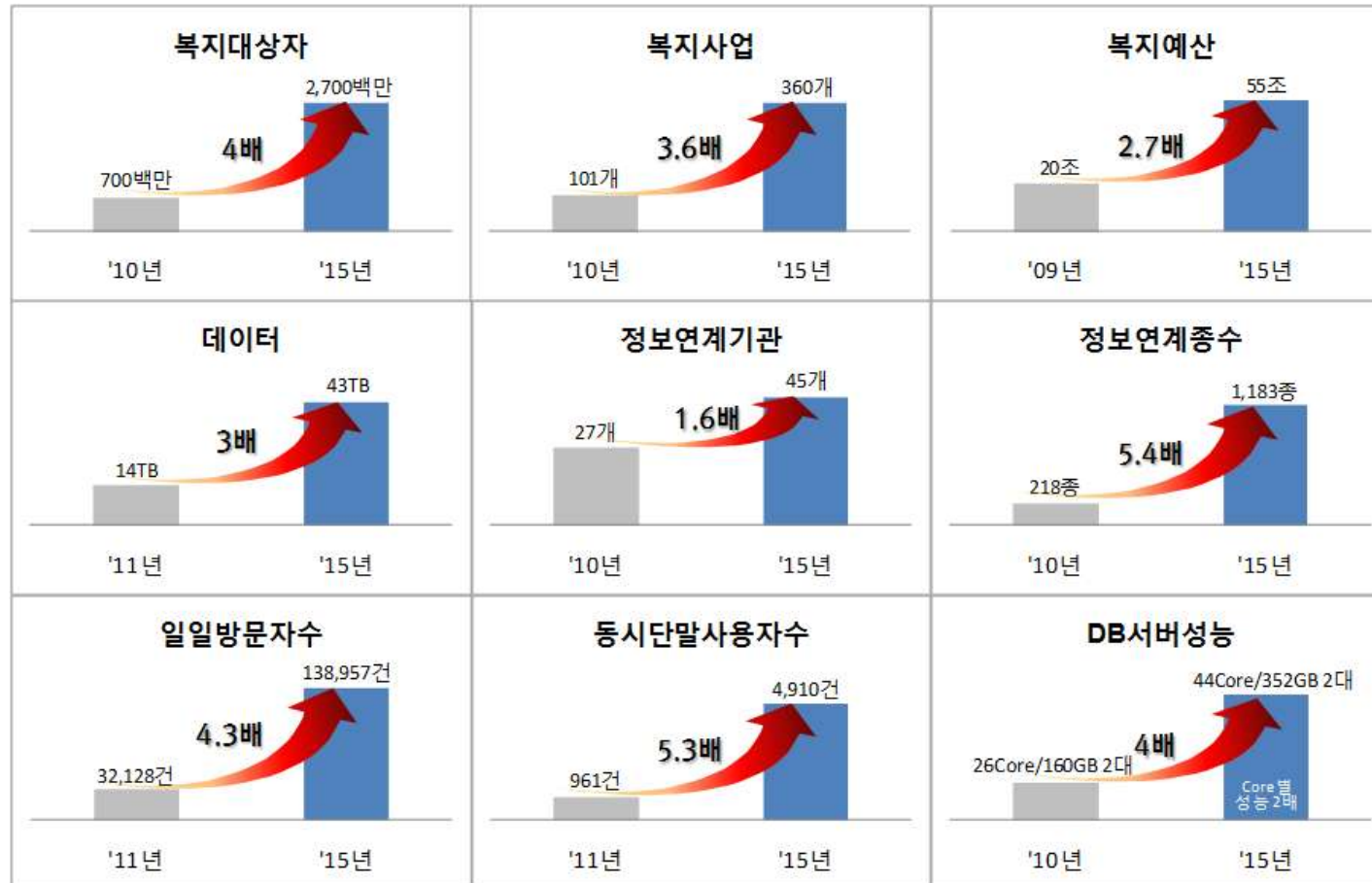
4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 개인별·가족별 통합 관리를 통해 세분화되고 정교한 정책 수립 가능
- 수혜자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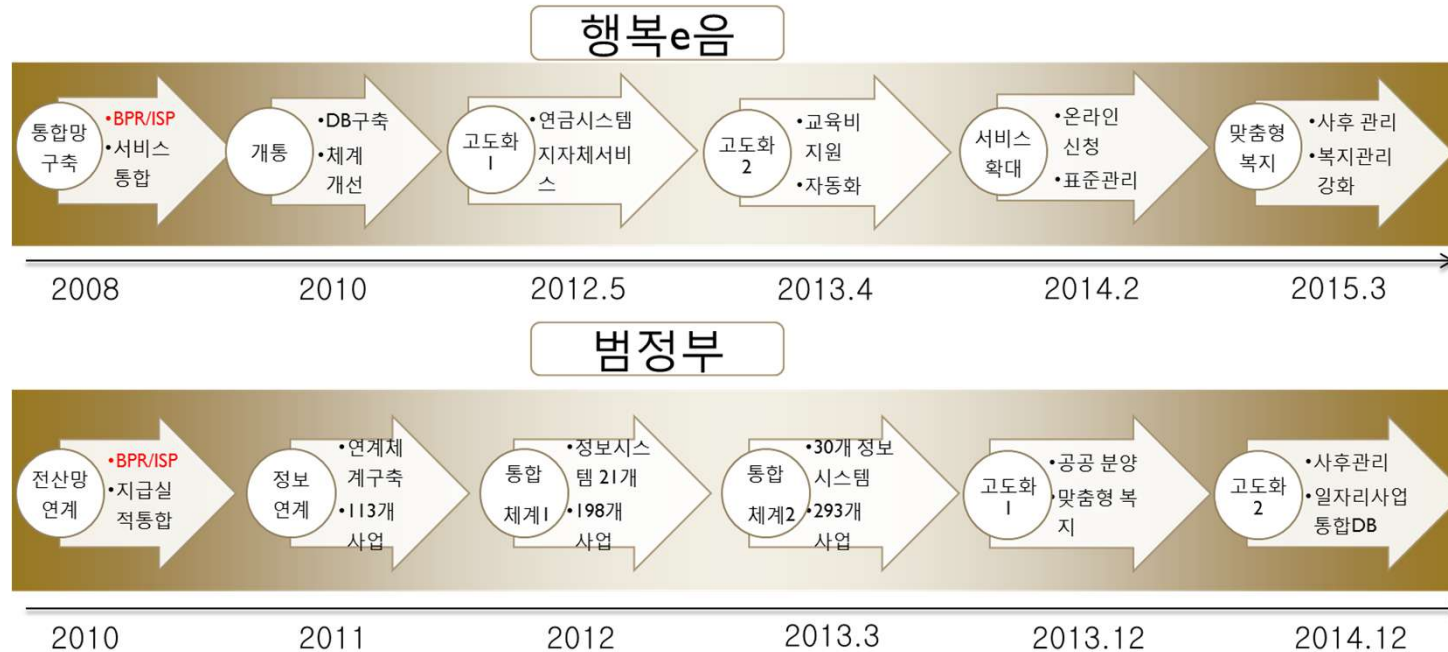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

- 설계에 고려되지 않았던 복지사업 증대로 시스템 복잡도 가속화
 -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한 특례조항 등으로 예외처리가 빈번하게 발생
- 잦은 시스템 변경과 짧은 구축기간으로 완성도 저하
 - 장애인연금(5개월→3개월), 기초연금(4개월→2개월), 개별급여(11개월→6개월)



차세대 시스템 조기 구축이 시급

-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기획(BPR/ISP) 사업 진행('15.9~'16.7)
- 2020년대 복지 패러다임을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필요
 - 예산확보,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0년 개통 가능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복지1.0 (복지제도 기반조성)

복지2.0 (양적확대)

정부별	3,4 공화국 박정희 (1960~1980)	5 공화국 전두환 (1981~1987)	6 공화국 노태우 (1988~1992)	문민정부 김영삼 (1993~1997)	국민의 정부 김대중 (1998~2002)	참여정부 노무현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
정책기조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사회보험	산재보험(1964)			고용보험(1995)	산재/고용보험적용 확대(2000~05)			
	건강보험(1977)	건보확대	전국민건강보험 (1989)		의약분업(2000), 건보통합(조직2000, 재정2003)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기초연금(2014)
	공무원연금(1960) 국민연금('63분리) 사학연금(1975)		국민연금(1988)	국민연금확대	전국민국민연금 기반구축(1999)	「국민연금법」개정 (급여인하등,2007)	「공무원연금법」 개정(2009)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2013), 건강보험보장성 강화(2014)
공공부조 국가보훈	생활보호제도(1962) 국가보훈(1962) 의료보호제도(1997)	생보대상자 직업훈련(1981) 영세민종합대책 (1982)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1987)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 공급(1989)		경로연금(1998)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2000)	「기초노령연금법」 (2007) 차상위계층지원 (의료급여, 자활, 2004) 장애수당확대(2005)	기초노령연금(2008) 장애인연금(2010)	맞춤형급여(2015) 맞춤형주거복지 (2014~2017)
	사회서비스	가족계획사업(1962)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발표 (1978)	노인복지기반마련 (1981) 재가노인복지사업 (1987)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구성(1989) 장애인등록제도 (1988)	공중보건, 건강증진정책 확대(1995)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	장래인복지5개년 계획(1998)	보육확대(2004)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2005) 사회서비스일자리 (2004)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 다문화가족지원센 터(2006)	5세아 누리과정, 0~2세아 무상보육 (2012) 적극적노동시장 정책확대(ALMP, 2008)
교육비지원							튼튼한 학자금 대출(ICL, 2010) 맞춤형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2012)	아동기 청소년 학비,교재 대 지원(2015) 무상 교육 확대 0~5세 (2013) 다자녀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2014~2017)
조세지출							근로장려세제 (EITC,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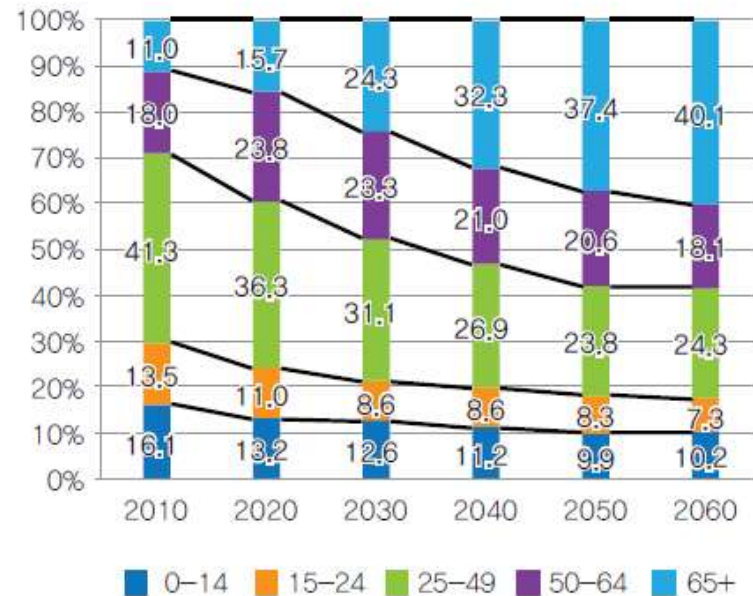
복지3.0 Keyword

-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지출 급증

-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9.8%('13년) → 22.6%('40년)

-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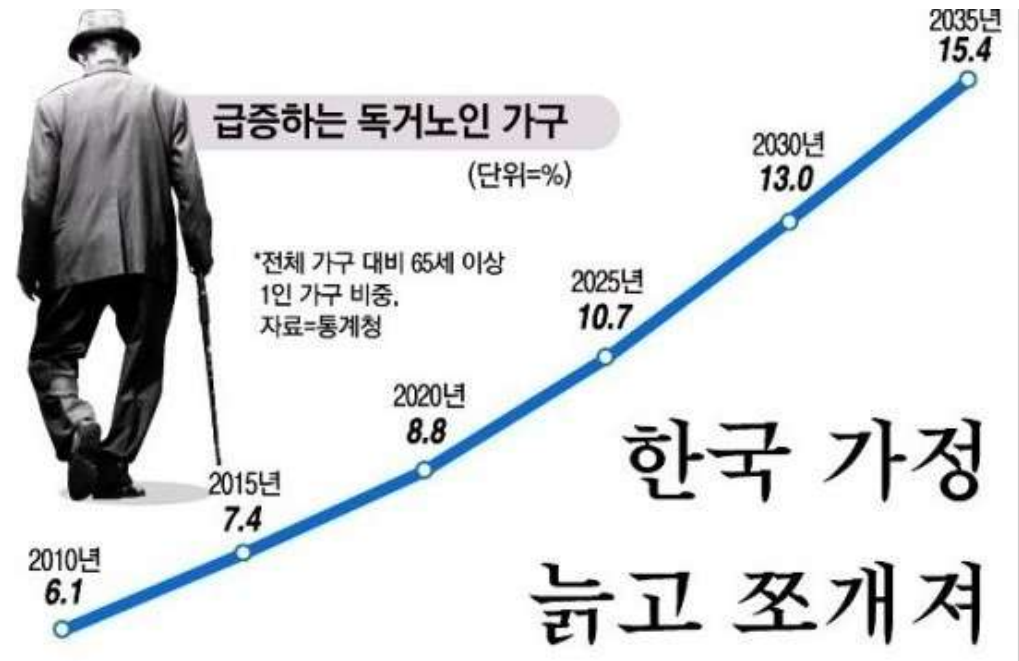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5.2명('10년) → 22.1명('20년) → 38.6명('30년)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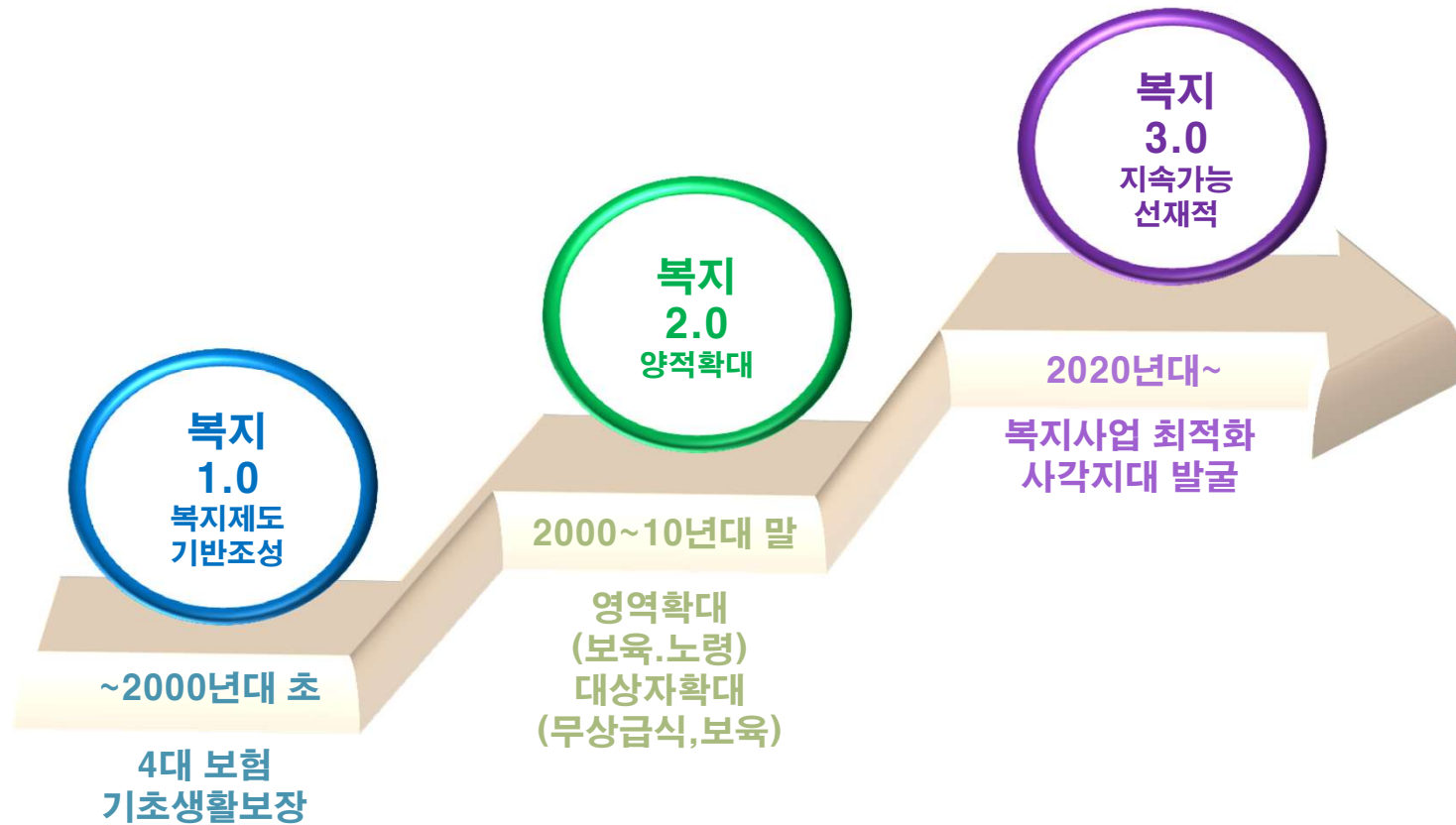
복지3.0 Keyword

-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 심화 우려
 - 잠재성장률: 3.0%('16~'20년) → 1.8%('26~'30년)
- 독거노인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 확대
 - 독거노인가구 비중: 7.4%('15년) → 15.4%('35년)



선제적 복지(Proactive Welfare)

복지3.0 Keyword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넘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1)

- **각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 시급**
 - 현재 정부는 중앙정부의 360개 사업을 297개로 정비 추진 중
 - 5,891개 지자체 사업 중 25% 이상이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조정에 한계
-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
 - 신규 사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자, 지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중앙정부 유사중복 사업〉

(단위: 개, 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A)		유사성 의심 지자체 자체사업(B)		비율(B/A*100)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5,891	64,826	1,496	9,997	25.4	15.4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5)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2)


● 시스템 연계범위를 중앙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지원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성동구 e-나눔 시스템>

1년치 김치 한꺼번에 “주역구구 복지” 중복수혜 발생 !!

서울에 사는 백거노인 이모씨(70) 집 냉장고와 부엌에는 김치가 가득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이씨에게 지난해 말 **민간기관과 복지시설 등 4곳에서 보내준 김치가 10kg씩 모두 40kg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치 10kg은 한 사람이 매일 두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김치는 겨울 내내 김치를 먹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 남은 김치**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 중이다.



在家복지 서비스 중복수혜 현황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복지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민간기관과 종교·봉사단체 등의 지원 동향까지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수혜자들에게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바람에 지원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혜자들은 과도한 중복 지원을 받다가 한편 반대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연말이면 중복 지원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면서 “수혜 대상자와 복지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급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는 복지시설 입상자와 서비스 대상자 현상이 빠져있는 상태다. 서울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적으로 복지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이러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3)

- 수급자격 자동판정 시스템을 통해 복지 깔때기 현상 해소
- 일선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현재) 판정을 위한 자료 확인 후 사용자가 판정

The diagram shows a user box on the left with four arrows pointing to four data cylinders on the right. Each arrow is labeled '조회' (search) and has a magnifying glass icon. The cylinders are labeled: '수급자 정보 (가구, 거소 등)', '수혜이력정보', '자격정보 선정기준, 지침', and '...'.

**번거롭고 불편한 시스템
사용자 업무 경험 · 지식에 의존**

- 수급자 판정 및 업무 처리시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 조회
- 사용자의 경험 및 지식에 따라 처리결과, 처리량 격차가 큼

(차세대) 자동판정하고, 사용자는 이상 유무만 점검

The diagram shows a central box labeled '사회보장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Social Security Decision Support System) containing icons for '예측정보' (prediction info), '분석정보' (analysis info), '정보검색' (info search), and '매뉴얼' (manual). To the left, a box labeled '시스템 사용자' (System User) contains '사용능력 상급자' (Advanced user) and '사용능력 하급자' (Basic user). To the right, four data cylinders are shown, labeled: '수급자 정보 (가구, 거소 등)', '수혜이력정보', '자격정보 선정기준, 지침', and '...'. Arrows point from the system box to the user box and from the system box to the data cylinders. The system box is labeled '자격판정' (Qualification Assessment) at the bottom.

**편리하고 똑똑한 시스템
사용자별 업무 처리량 · 결과 유사**

- 시스템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판정 및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가능
- 사용자 별 처리결과, 처리량 격차가 미미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4)

●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

- 공공정보, SNS 등을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시스템적으로 발굴
- 수급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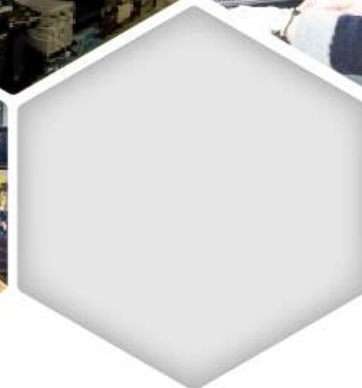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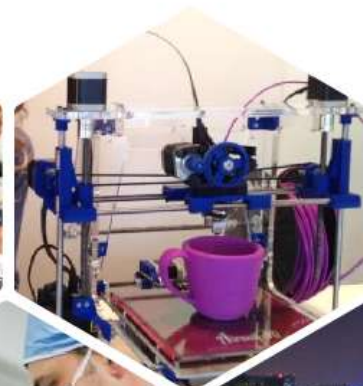
- 호주 정부는 10년 계획('13~'22년)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
 - 기획사업 예산: 150억원(16.2M AUD), 구축사업 예산: 1조원(1.2~1.5B AUD)
- 3대 핵심가치 지향
 - ① 전달체계 혁신, ② 복지정책 표준화, ③ 수요자 중심 ICT 설계 및 효율화



정보시스템은 정책의 반영물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혁신을 선도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
www.SPRI.kr T. 070-4915-8800 F. 031-739-7199